

# 김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3141호
----------	---------

제출년월일 2022. 11. .  
제 출 자 유영숙의원

##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3조)
- 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및 사업추진 등 (안 제4조 ~ 5조)
- 다. 교육 및 홍보, 민간위탁 (안 제6조 ~ 7조)
- 라. 재정지원 및 비밀유지 (안 제8조 ~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협의
- 다.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2. 11. . ~ 2022. 11. .
    - 나) 예고결과 :
  - 2) 부서협의
    - 가) 협의기간 : 2022. 11. . ~ 2022. 11. .
    - 나) 협의결과 :
  - 3) 관련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김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3.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 및 협력체계 사업
3.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
5. 엔딩노트 제작 및 보급, 유품 정리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 법률 ( 약칭: 연명의료결정법 )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27호, 2021. 12. 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 연명의료결정제도) 044-202-2615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호스피스 완화의료) 044-202-2517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7.>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 가. 삭제 <2018. 3. 27.>
  - 나. 삭제 <2018. 3. 27.>
  - 다. 삭제 <2018. 3. 27.>
  - 라. 삭제 <2018. 3. 27.>
  - 마. 삭제 <2018. 3. 27.>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 가. 암
  -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라. 만성 간경화
  -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모든 행위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호스피스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말기환자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5.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
  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리기관, 등록기관, 의료기관,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는 이 법에서 정한 연명의료의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제32조(정보 유출 금지)** 관리기관, 등록기관, 의료기관,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또는 호스피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제33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가족(이 조에서는 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본을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 열람의 범위와 절차 및 열람 거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 2022.09.21]

(일부개정) 2022.09.21 조례 제1928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행정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80-2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4., 2022.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김포시장(이 조례에서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출연기관(이 조례에서 "산하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김포시(이 조례에서 "시"라 한다)가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③ 삭제 <2020.2.14.>

③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0.2.14.>]

**제5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김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5. 상급기관의 운영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지정된 경우

③ 재계약하는 사무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2.14.]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 제1항은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산안 및 보고안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2.14.]

[중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2.14.>]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적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개정 2020.2.14.>
2. 재정부담능력 <개정 2020.2.14.>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신설 2020.2.14.>
4. 책임능력 및 공신력 <신설 2020.2.14.>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신설 2020.2.14.>

[제6조에서 이동 2020.2.14.]

[중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2.14.>]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14.>

②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김포시 사무수탁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4.>

[제7조에서 이동 2020.2.14.]

[중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2.14.>]

**제9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 성과평가, 재계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1. 해당 민간위탁사무 관련 관계공무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2.14.>

[제8조에서 이동 2020.2.14.]

[중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2.14.>]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20.2.14.]

[중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2.14.>]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0.2.14.]

[중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2.14.>]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20.2.14.>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20.2.14.>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2.14.]

[중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2.14.>]

**제13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14.]

**제14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7.2.>

② 협약서에는 위탁기관,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수탁기관의 의무·준수사항,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2.14.]

[중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2.14.>]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2.14.]

[중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2.14.>]

**제1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2.14.]

[중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2.14.>]

**제17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관련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2.14.]

[중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2.14.>]

**제18조(사용료 징수 등)**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2.14.]

[중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2.14.>]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았을 때
2. 수탁기관이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2.14.>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6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2.14.]

[중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2.14.>]

**제20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14.>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은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2.14.]

[중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2.14.>]

**제21조**삭제 <2021.7.2.>

**제2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는 필요시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

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0.2.14.]

**제23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② 시장은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제20조에서 이동 2020.2.14.]

**제24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제23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14.]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0.2.14.]